

日, 1896년 8도→13도 재편...나주 아닌 광주에 도청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1. 전라남도의 시작

‘남도 근대화 탐사’ 시리즈 〈전남편〉은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5만 여건의 전라남도 관련 문건 가운데 2353건을 건네받아 이를 번역·분석한 뒤 기존 논문과 서적 등을 참조해 작성된다.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전남도의 관할에 속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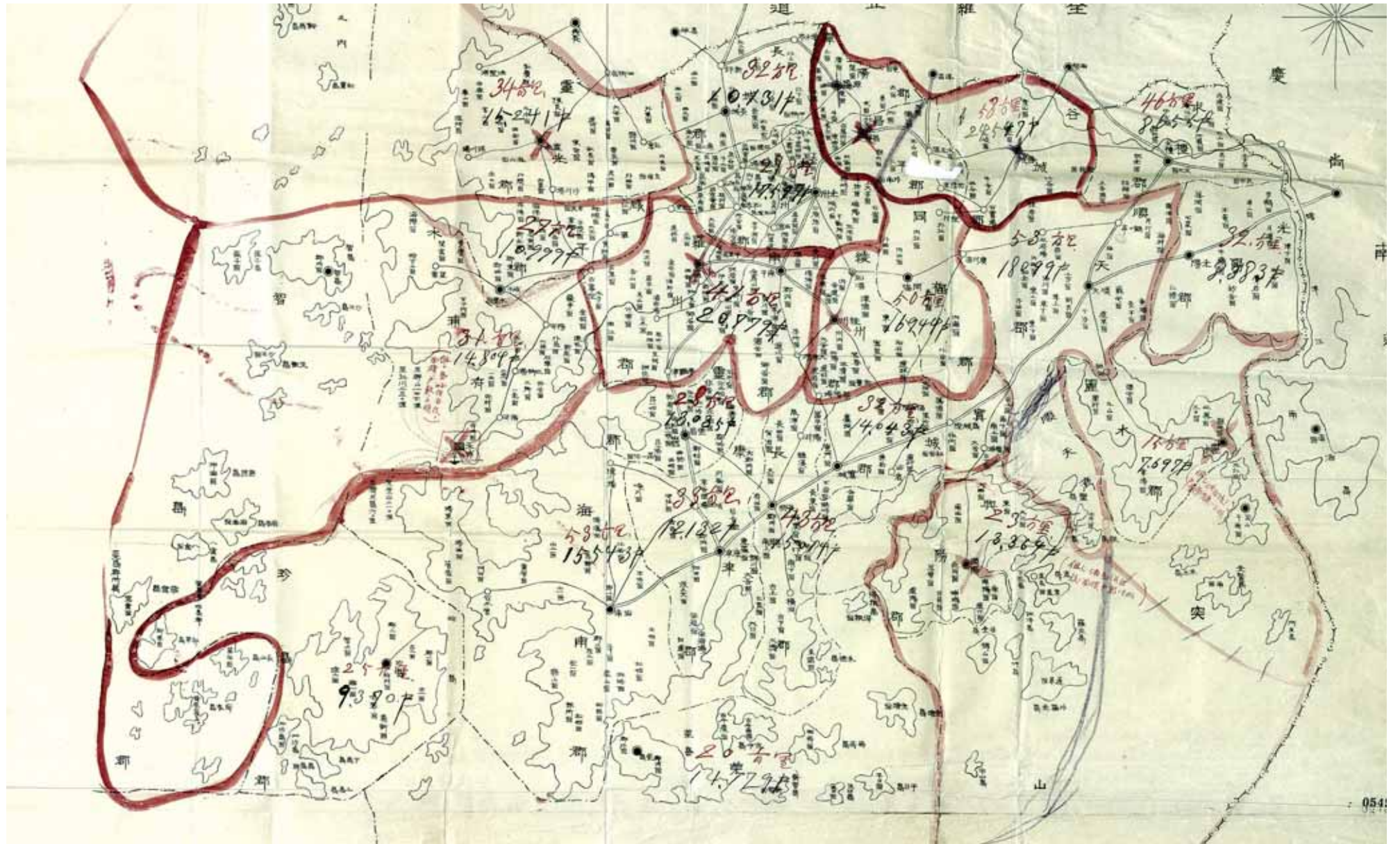


1897년 개항한 목포는 전남에서 생산된 곡식과 함께 면화, 면직물 등을 수출해가는 일제의 전진기지가 된다. 사진은 1930년대 목포면화 판매소 전경.

■ 1911~1941년 전국 13도 인구현황

	1911		1921		1931		1941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전국	14,055,869	2,879,870	17,462,918	3,308,614	20,262,958	3,381,179	24,703,897	4,568,617
경기도	1,518,352	319,470	1,808,617	351,766	2,060,160	401,866	2,940,185	533,035
충청북도	596,396	126,563	777,176	146,749	863,896	162,097	911,672	167,155
충청남도	923,962	200,563	1,142,731	216,614	1,362,910	253,304	1,582,108	286,034
전라북도	979,775	209,548	1,215,617	238,110	1,456,271	284,091	1,624,200	305,303
전라남도	1,853,715	336,833	1,995,750	379,879	2,242,335	441,198	2,656,543	510,351
경상북도	1,669,775	342,671	2,126,691	400,457	2,316,054	442,012	2,480,783	461,317
경상남도	1,505,799	311,975	1,808,561	356,567	2,075,975	406,051	2,341,531	441,779
황해도	1,016,411	224,049	1,295,488	261,740	1,485,085	290,164	1,839,831	351,210
평안남도	929,772	194,210	1,105,807	212,580	1,306,497	246,235	1,694,697	317,452
평안북도	1,009,198	189,021	1,235,652	225,984	1,496,518	269,697	1,793,617	319,812
강원도	853,135	169,979	1,186,187	217,661	1,398,225	254,936	1,747,852	317,632
함경남도	954,891	177,463	1,245,106	211,775	1,466,336	253,085	1,936,717	334,577
함경북도	444,708	77,525	549,440	88,732	732,696	126,443	1,154,161	212,960

* 전라남도는 인구 측면에서 1911년 경상북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했으나 1941년부터 경상북도를 제치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통계청 자료 참조)



이 도면은 1912년 4월 일본헌병대사령부에서 제작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 초기에 제작된 기초도면이거나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축척은 30만분의 1이고, 범례에 도·부·군이 구별돼 있다. 붉은선은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경계를 말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면적 등 정보를 도면에 기록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 도면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팔도강산’의 8도는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말한다. 1413년(태종 13년) 정해진 이 행정구역은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전국을 ‘23부제’로 나누기 전까지 무려 482년 동안 유지됐었다.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23부제 실시에 따라 전라도에 ‘부’가 설치된 곳은 전주, 남원, 나주, 제주 등이었다. 그러나 이 일제의 ‘냄새’가 진동하는 23부제는 채 2년이 가지 못했다. 세계 열강의 탐바구니 속에서 일제가 저지른 을미사변과 단발령, 고종의 아관파천 등이 이어졌고, 친일내각이 실각하면서 다시 지방행정구역은 조정됐다. 그것이 1896년 8월 4일 칙령 제 36호로 도입된 ‘13도제’다.

13도는 앞서 8도 가운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를 남북으로 분리하면서 탄생했다. 전라도는 노령산맥 이남이 전라남도, 그 위가 전라북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물론 이 경계는 수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의 구역으로 조정된 것이다.

전남의 도청소재지는 당시 전남의 최대 도시였던 나주가 아닌 이제 막 도시로 성장세에 접어들어 광주에 자리했고 이는 향후 전남의 성장과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전남은 ‘조선의 보고’로 불릴 만큼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생산이 다른 도에 비해 압도적이었고, 인구 측면에서도 13개의 도 가운데 경상북도와 1, 2위를 다투 정도였다. 〈표 참조〉한일 강제병합 1년 뒤인 1911년 전남의 인구는 165만3715명으로, 경북(166만9775명)으로 두 번째였지만 30년 뒤인 1941년 265만6543명으로, 경북(248만783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일제강점기 전남은 농수산물은 물론 전국 최대 면화재배지였다. 국가기록원이 소장중인 ‘면(綿)의 전남(1926)’에 따르면 1904년 목포영사관을 통해 미국 면화종자를 들여온 일제는 기후, 풍부한 노동력, 항구 근접 등을 감안해 전남을 면화 재배 최적지로 낙점했다. 1925년 전남의 면화 생산량은 4942만1579근으로, 전국(1억4018만4382근) 생산량의 3분의 1을 넘어설 정도였다. 무안군이 768만6717근으로, 도내 최대 생산지였고, 해남(603만2756근), 여수(400만근), 나주(319만3166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수산물·공산품 풍부해 ‘조선의 보고’로

일, 면화·정미 등 수송에 목포·여수 거점화

수탈물 급증...도로·철도 등 근대시설 설치

1914년 시·군·면 조정...현재까지 이어져

1924년 발간된 ‘전라남도의 공업’은 “1910년 전남의 공업 생산액은 106만1000원에 불과했으나 그로부터 13년 뒤인 1923년에 그 67배에 이르는 7094만2464원에 달했다”고 적고 있다. 양잠업을 필두로 축산물, 정미, 기계제작, 제지 등 당시로서는 ‘첨단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생산품을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는데 목포와 여수 등을 거점항구로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생산된 면화를 가공하는 방직·방직공장을 광주·전남에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1910년대 후반부터다.

하지만 인구 최대 거주지이면서 최고의 생산지이기도 했던 전남에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더디게 설치됐다. 일본과 가까운 부산, 대구 등을 중시한 일제가 재원과 물자 부족 속에 선택한 전략 탓이었다. 수도 경성과 부산을 잇는 철도 경부선이 1905년 개통됐지만 경성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은 그로부터 9년 뒤인 1914년에야 준공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전남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다시 말해 ‘수탈’해 갈 것이 급증하면서 이들은 서울 철도를 놓았고, 전남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등 시설을 설치해나갔다. 수도 경성과 목포·군산·영일만·진남포 등 주요 개항장을 잇는 주요 도로를 일제가 통감부를 둔 1906년 본격화했다. 이 도로는 사실 항일의병들을 진압하는데 쓰였다. 따라서 도로는 ‘의병 진압’, 철도는 ‘수탈’이 그 주목적이었

다고 볼 수 있었다.

1930년에는 장성~광주~나주~목포를 잇는 1등도로(지금의 국도 및 고속도로) 138.28km, 광주~목포와 각 군을 연결하는 2등도로(지방도)는 639.60km, 군내를 연결하는 3등도로(군도)는 935.67km가 각각 완성됐다.〈전라남도사정지, 1931〉

전남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1896년에서 10년이 지난 1906년 일제 통감부는 ‘지방제도조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도내 각 시·군과 도의 접경의 경계를 짓는 행정구역의 변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또 중앙을 장악한 일제가 지방을 집어삼킬 본격적인 준비를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다. 1907년 ‘지방제도 개정 청의서’와 ‘지방구역 분할 설명서’를 작성하며 이론적 토대를 만든 일제는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관계 제정과 동시에 지방 행정구역을 도·부·군·면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들 지방행정기관에 도장관·부윤·군수·면장(지방관 대우)을 두도록 했다. 이들은 기관장의 권한, 기관의 청사 등에 대한 규정을 속속 만들면서 준비를 끝낸 일제는 1911년 시작한 토지조사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1914년 부·군·면의 폐합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1개의 부가 새로 설치되고, 317개였던 군이 220개로 줄어들었다. 또 4322개였던 면이 2521개로 통합됐다. 이러한 군과 면의 폐합을 위해 총독부가 내세운 명분은 이전의 행정구역이 인구·재정에 대한 심한 격차, 시장 운영, 경비 절약 등으로, 결국 ‘통치 편의’였다. 폐합 기준은 군의 경우 면적 40방리(사방으로 1리(里)가 되는 넓이), 인구 5만(이북)~10만 명(이남), 1개군 10개면이었고, 면은 면적 4방리, 호수 800호 등이었다.

일제의 이 조치는 대대로 이어졌던 조선의 행정구역을 그들의 입맛과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고유 명칭과 역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의 전남과 각 시·군·면의 경계는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거의 변화 없이 98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사건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 평일 주중 점심식사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